

2024년 북한정세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향:

노동당 전원회의 확대회의('23. 12.26-30) 보고문건을 중심으로

김연수
(국방대 안보정책학과 교수)

I. 2023년 평가와 2024년 과제 제시

1. 2023년 평가

○ 북한은 지난해를 “당 제8차대회가 세운 승리의 리정표를 따라 쟁취한 값비싼 성과들이 루적되어 그 위력이 전면적으로 발현되기 시작한 가장 고무적인 변혁의 해”로 평가

- 북한은 “전반적 국력을 더 크게 증대”시켰으며, “국가사회생활전반을 확고한 상승 궤도에 올려 세웠다”고 자평

- 나아가, “사회주의건설과 국력강화의 각 방면에서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주장

※ 특히, 북한은 지난해 “알곡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했다는 점을 강조

○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비롯된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해야 했다”는 점을 언급, 북한의 식량사정이 여전히 당해 연도의 작황 상황에 의해 크게 좌우, 식량난 극복이 난제임을 드러냄

※ 김정은은 지난 제8차 당대회시('21.1.5-7) “5개년계획기간 인민들의 식의주 문제해결에서 돌파구를 열겠다”고 공언

○ 또한, “인민경제 전반에서 이룩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음을 경제수치로 제시하고 있으나, “전례 없이 혹독한 난관”이나 “경제부문에 잠복해 있는 패배주의와 기술신비주의”, 그리고 “대내외적으로 형성된 불리한 형세” 등을 언급, 여전히 경제사정과 대내외적 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인

※ 김정은은 지난 8차 당대회시에도 7차 당대회('16.5.6-9) 5개년계획의 “국가경제의 장성목표들이 심히 미진되고, 인민생활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경제부진 상황을 고백

- 한편, 김정은은 ‘2023년 평가’에서 절반이상의 분량을 할애하면서 가장 먼저 경제 부문을 평가, 북한당국의 정책의 초점이 대내 경제문제에 맞춰져 있음을 시사
- 그러나, 김정은이 여전히 내각 중심의 “경제사령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의 한계를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 노출

2. 2024년 과제 제시

- 북한은 새로운 목표와 과제 설정보다는 제8차 당대회시 설정한 목표 도달 위한 문제점 해결에 주력하는 보수적 목표 설정
- “금후 우리의 총적방향은 유리한 형세와 국면을 더욱 확대하고 적극 활용하여 당 제8차대회의 투쟁 강령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전진을 위한 발판을 닦는 것”
- “특히 다음해부터 당대회 결정 관철에서 미진 되거나 걸림돌로 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주되는 힘을 넣어야 함”
- “2024년 말에 가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5개년계획 수행의 명백한 실천 담보가 확보되어야 함”
- ※ 김정은은 제8차 당대회시 향후 5개년계획이 “정비전략, 보강전략”으로서의 의미 갖는다는 점을 既 언급

II. 2024년 북한정세 전망

1. 대내부문

- 정치적으로는 김정은 유일영도체계 확립 노력을 지속할 것
- “지난 3년간의 경험은 당의 령도체계가 튼튼하고 당에 대한 전체인민의 신뢰가 굳건한 조건에서 난관극복, 변화발전의 중대과제를 능히 성과 있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
-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언제 어디서나 당중앙의 권위를 절대화하고 백방으로 옹위하여야 하며, 그 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요소에 대해서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비타

협적인 투쟁을 벌려야함”(김정은 제8차당대회보고)

○ 경제면에서는 기간산업부문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정비와 보강에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향상에 대한 기대 충족 노력 예상

-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 장성에 박차를 가하고 정비보강사업을 다그쳐 끝내며 새년도에도 12개 중요고지를 계속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

- “인민생활문제해결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제일 절박한 과제”(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회의 연설, '23.9.27)

-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는 것은 공화국의 존엄, 당의 권위와 직결되어 있는 정치적 문제”(로동신문, '24.1.8)

○ 북한은 특히 식량난 문제를 최우선과제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것

-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키고 사회주의 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김정은)

- “오늘 우리 앞에 제일 절박하게 나서는 것은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푸는 것. 식량문제를 풀어야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 향상시킬 수 있으며 목숨보다 귀중한 우리의 존엄을 지킬 수 있고 혁명과 건설을 마음먹은 대로 배심 있게 내밀 수 있음”(로동신문, '24. 1. 8)

- “몇년어간에 나라의 농업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하여 식량문제, 인민들의 식생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는 우리 당의 결심은 확고부동”(로동신문, '24. 1. 8)

○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생산능력의 확장과 ‘준(準) 핵 3원체제’(nuclear triad) 구축 등 핵 무력 기반 군사적 준비태세 강화에 주력할 것

- “핵무기 부분에서 핵무기 생산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는 믿음직한 토대를 구축해야함”

※ “현 단계의 증대과제는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이고, 핵타격수단들의 다종화를 실현 하며 여러 군중에 실전 배비하는 사업을 강력히 실행해 나가는 것”(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 14기 9차회의 연설, '23.9.27)

- “2024년도 핵무기 생산계획수행을 위한 힘있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

※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 나라의 생존권과 발전권을 담보하고 전쟁을 억제하며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핵무기발전을 고도화 함”(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회의시 북한 헌법 제4장 58조 수정보충)

- “압도적인 전쟁대응능력과 철저하고도 완전한 군사적 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 기 위한 사업에 계속 박차를 가할 것”

※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 제고, 국방력발전 5대 중점 목표 수행 미진 과업 빠른 기간 내 집행, 무인무장장비들과 위력한 전자전수단들 개발생산” 등 군사력 강화 지시

-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 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력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령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함”

※ 북한은 “국가핵무기관리체계 ‘핵방아쇠’ 작동점검”훈련을 실시('23. 3. 28)했다고 既언급

○ 사회적으로는 비사회주의현상과의 투쟁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세대들의 사회주의적 이탈상황 방지노력 강화할 것

- “온갖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현상을 억제하도록 통일적이며 강도 높은 투쟁을 계속 드세계 벌려나가야 함”(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회의연설, '23. 9. 27)

- “늘어나고 있는 비사회주의적인 문제들을 일소해야함”(김정은 제5차 전국어머니 대회 연설, '23. 12. 4)

- “학생소년들을 위한 일은 경제실무적인 사업이기 전에 우리조국의 양양한 전도를 담보하는 정치적 사업임”

2. 대외부문

- 대미 투쟁적 관점에 머물렀던 지난해와는 달리 적극적이며 책략적인 대외정책추진 의지를 표명한바 대외적 활동 강화 예상
 - “대외사업부문에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책략적 방침을 제시”
 - “대외사업부문에서는 변화 발전하는 국제정세에 주동적으로, 책략적으로 대처해 나가야함”
 - “당의 존엄사수, 국위제고,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강국의 지위에 맞는 공화국의 외교사 써 나가야 함”
- 중국-러시아 등 전통적 사회주의우방 국가들과의 관계강화 및 반미·반서방적 국가들과의 연대강화 노력할 것
 - “사회주의나라 집권당들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면서 나라의 대외영역을 보다 확대 강화하며,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드는 반제자주적인 나라들과의 관계를 가일층 발전시켜야함”
- ※ 올해는 북중외교관계수립 75주년으로 양국은 既 올해를 ‘북중친선의 해’로 선포한 바, 북중간 상호정상급방문 등 활발한 양자외교활동 예상
 - 금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대외관계 설정의 방향으로, 1)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강화, 2) 반제자주력량과의 관계강화, 3) 대미관계에서의 초강경대응 順으로 우선순위 설정
- ※ 제8차 당 대회에서는 1) 대미관계에의 책략적 대응, 2) 반제력량 강화, 3) 사회주의권과의 관계의 順으로 언급
- “나라의 대외영역을 보다 확대강화”할 필요성을 언급, 대외관계의 조정 내지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 노력 예상
 - 지난해 말 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일부국가들의 현지 공관폐쇄와 신규 공관 개설 추진사례 既 발생
 - 최근 김정은의 일본지진 피해에 대한 일본수상에 대한 이례적인 위문전문 발송('24. 1. 5)도 대일외교관계 정상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의미

○ 대미 강경태도 고수하며 미국선거에의 영향력 행사시도 가능성

-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해야함”
- “적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를 초월하는 초강경대응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행사로 제압해나가는 것은 우리의 드팀없는 대적투쟁원칙이고 방식임”

※ “미국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국이라는 실체와 대조선정책의 본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대미전략을 책략적으로 수립할 것”(김정은 제8차 당대회 보고)

- 수십건의 친서교환과 그 공개 전례에 비춰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 개인적인 서한 등 메시지 교환 가능성

3. 대남부문

○ 대남관계에서의 근본적인 노선 전환 시도 가능성: ‘고려연방제통일방안’의 현실화 불가능성 인정下 새 통일방안제시 가능성

-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랭철하게 분석한데 립각하여 대남 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전환을 할 데 대한 로선 제시”
- “현재 조선반도에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가 병존하고 있는데 대하여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음”
-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음”
- “우리의 조국통일로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음”
-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립장을 새롭게 정립해야할 절박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음”

○ 한반도내 ‘2개 국가론’의 인정 불가피성 방향으로 대남정책 추진예상 :

“남반부 전 령토 평정” or 평화협정 체결

- “이제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생각”
- “우리가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미국의 식민지 쫓개에 불과한 괴이한 족속들과 통일문제를 논한다는 것이 우리의 국격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음”
-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음. 이 것이 오늘 북과 남의 관계를 보여주는 현주소”
- “결론은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며 근본적으로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해야 함”

※ 북한은 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의 김정은 결론이후 곧바로 최선희 외무상 주재로 리선권 통일전선부장 등의 참여下 “대남대적부문의 기구들을 폐지 및 정리하고, 근본적인 투쟁원칙과 방향을 전환함에 대하여 해당부문 일군들과 협의회를 진행했다”고 밝힘(로동신문, '24.1.2)

-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기정 사실화 하고 남반부의 전 령토를 평정하려는 우리 군대의 강력한 군사행동을 보조를 맞추어 나가기 위한 준비를 예견성 있게 강구해나갈 데 대한 중요과업들을 제시”

※ “조선민주주의공화국의 핵무력은 국가의 주권과 령토완전, 근본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전쟁을 방지하며 세계의 전략적안정을 보장하는 위력한 수단임”(「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22. 9. 8)

※ “공화국 무장력의 사명이 국가주권과 령토완전, 인민의 권익을 옹호하며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고 조국의 평화와 번영을 강력한 국력으로 담보하는에 있음”(최고인민회의 제14기 9차회의시 북한 헌법 수정보충, '23. 9. 27)

※ 이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20.6.16), 제8차당대회시 금강산지구 아측 시설 철거와 금강산 지구개발 5개년 계획의 새 설계 지시 등을 통해 김정은은 교륙협력중심의 남북관계불원 입장 천명

※ "북남관계에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가려는 립장과 자세를 가져야함. 남조선당국은 방역협력, 인도주의적협력, 개별관광과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들을 꺼내들고 북남관계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음"(김정은 제8차 당대회보고)

○ "남조선놈들, 000괴뢰정권, 역도, 000괴뢰패당" 등 대남 호전적 강경언사로 일관, 대남 군사적 도발 가능성

- "반공화국적대행위들이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져 쌍방 무력간 충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범행단계로 명백히 진화되었다는 것"

- "형식상으로는 무력충돌방지라는 미약한 사명을 늘던 9. 19북남군사분야합의의 파기"

- "군사분계선 지역에서 적들의 도발적 망동들이 보다 우심해지고, 전반적인 괴뢰군 무력이 재편성 및 증강되고 있는 사실 등 날로 표면화되고 있는 급진적인 군사적 움직임들도 명백히 불순한 침략전쟁기도의 발로임"

- "전쟁이란 말은 이미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현실적인 실체로 다가오고 있음"

○ 남한의 국내정치 분열 획책 등 북한의 남한의 선거국면 등에 대한 노골적 개입 가능성

- "대한민국" 및 MDL의 "국경선" 호칭 일반화 시도 등은 평화협정 체결의 당위성 유도 등으로 남한 내 여론 분열을 기도

※ 북한군 총참모부는 MDL을 "국경선"로 호칭(로동신문, '24.1.6)

- 동시에 대내적으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군주체제(socialist monarchy)' 정립 분위기 유도

III. 우리의 대응방향

1. 총괄 대책 : 북한의 '2개국가론' 주장은 남한의 통일 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도전

- '통일중심의 한반도 정책'을 대내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정교화 해야 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새롭게 정립된 '통일중심의 한반도 정책' 범주 내에서 통일외교정책과 통일지향의 대북정책을 정교화하고 이를 추진할 필요
- 북한의 핵능력에 대한 독자적인 대칭적 능력 확보 등 '안보 중심성' 확보를 위한 사활적 노력 경주할 필요

2. 부분별 대책

가. 대내정책

- '통일중심의 한반도 정책' 체계적 정립 위한 '가칭' 국익위원회' 출범 필요
 - ※ 북한의 공세적 대남인식 배경에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자신감과 아울러 남한내 분열적 정치현상에 대한 냉소·회화적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 유의
 - ※ 북한의 공세적 대남인식과는 무관하게 북한의 1) 아전인수식 대내외 정세인식, 2) 핵 과잉 자존감에 따른 대외적 선택제약, 3) 개혁개방정책의 배제지속 4) 북한주민들의 생활수준향상에 대한 기대 증가 등으로 인한 잠재적 체계균열요소 증가상황에도 유의할 필요
- 안보교육의 '통일중심의 사회화 교육'과 '통일중심의 학교 교육'으로의 방향 재설정 및 강화 필요
- 북한의 한반도내 '2개 국가론' 유포를 통한 남한의 통일논의 무력화 시도 차단 대책 강구할 필요
- 북한의 남한 내 선거국면 편승한 공작적 차원의 안보위기론 혹은 평화협정론 확산 시도 경계 필요

나. 대외정책

- 북한의 한미일 공조체제의 분열 기도 대응차원의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 한미일

공조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할 필요

○ ‘한민족공동체’로서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세계적으로 각인시키기 위한 통일 지향 외교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

- 북한의 ‘2개국가론’ 주장은 북한지도부와 중국지도부의 암묵적인 전략적 소통관계 속에서 진행되었을 개연성에 유의

※ 한반도 ‘2개국가론’은 소위 북한 급변사태 시 남한의 북한에 대한 관할권 주장을 원천적으로 배제시키는 논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

○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주장과 논리에 대한 대응책을 통일안보중심성 속에서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

- 미 대선에서 트럼프 당선 시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의 예상되는 주요한 변화의 하나로 평화협정 체결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 제기(*The Washington Post*, Dec. 29, 2023)

다. 대북정책

○ 원칙에 입각한 차분한(low-key) 대북정책기조 속에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에 주력해야 함

- 1) 아축의 교류협력 정책에 반하는 북한의 정책기조가 급변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 2)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 정책이 변화되기 어렵다는 점, 3) 북-중-러 삼각관계의 강화에 북한이 주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

○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뒤따를 수 있는 위기고조 상황을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는 아축의 위기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그 실행능력을 제고시켜야 함

○ 통일중심의 대북정책 소재를 개발하고 실행기반을 확보해 나가야함

- 북한내 정보유입을 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론을 고민하고 시민사회, 국제인권단체 등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대북 정보캠페인(information campaign) 전략을 적극화 할 필요

- 체제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대북 인권 어젠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야함 (끝).